

새만금 사업 친환경 개발의 방향과 전망

홍 욱 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 · 환경학)

I.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사업 반대 주장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1990년대 중반 시민환경단체들이 갯벌 훼손의 불가피성과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서 이 사업의 중지를 들고 나온 이래 지난 7~8년 동안 새만금 사업은 줄곧 국가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바, 최근에는 정부와 시민단체들 사이의 공방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환경단체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반대 주장을 외치고 있는 이면에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던 나머지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에서 그 이유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제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환경친화적 사업으로서 새만금 사업의 성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새만금 사업의 규모를 다시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이 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사업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주장하는 상당수 이 분야 전문가들까지도 새만금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적지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이 계획이 처음 입안되었을 당시 제안된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하자.

새만금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육지 면적은 40,100 ha로 1억2천만 평에 해당한다. 이 규모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에 상당하고, 또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20분의 1이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에 비교해 본다면 약 0.4퍼센트의 국토 확장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다른 한 비유로, 새만금 사업으로 얻어지는 간척지의 규모는 현재 여의도 면적의 96.5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여의도와 같이 산도 없고 구릉도 없고 또 골짜기도 없는,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 쓸모없는 데가 없는 그런 알짜배기 땅을 무려 96개나 합친 만큼의 땅 넓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새만금 사업의 입안자들은 새만금 사업에서 조성되는 토지 2만8천 헥타르는 전적으로 농업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1만천8백 헥타르에는 담수호를 건설하도록 예정하였다. 농업용지는 쌀생산을 위하여 17,950 헥타르의 논을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은 근교원예단

지, 양어단지, 농촌용지 및 공공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여의도 96배 면적의 전체 간척지 중에서 여의도 71개에 해당하는 면적 정도를 농업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29개에 해당하는 면적은 새만금호가 되는 셈이다. 또 농업용지 중에서 순수하게 논으로 개발되는 면적은 여의도 약 45개분에 해당하고, 근교원예단지에 여의도 6개분, 양어단지에 5개분, 도시 및 공공단지는 여의도 2개 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쌀농사를 짓는 논은 처음부터 전체 간척지 면적의 45 % 정도만 할당하는 것으로 예정된 셈이다.)

하지만 전체 농업용지 28,300 헥타르에서 논 경지와 원예단지, 양어단지, 농촌도시 및 공공용지를 모두 제외할 때 5,050 헥타르(여의도 면적 13개분)의 면적이 남게 되는데, 이 용지는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가타부지로 예정되었다. 말하자면, 새만금 사업의 처음 계획 당시부터 미래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남겨두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즐기치게 주장하는 논리의 하나는 전북도와 농림부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되, 그것으로 조성되는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겠다는 데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고, 그 땅을 산업용지로 전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표 1은 우리나라 몇 곳 주요 산업단지의 면적을 제시한 것인데, 이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국가산업단지라고 해도 그 전체 규모가 1,200~25,00 헥타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간척지 2만8천 헥타르에는 그런 대형 국가산업단지가 1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과연 전북도가 그 넓은 땅을 모두 산업단지로 활용하려고 꿈이나 꾸고 있는 것일까? 설령 전북도나 농림부가 그런 거대 산업단지 한 개 정도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해도 나머지 2만5천 여 ha 간척지의 대부분은 농경지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당연하다.

표 1. 우리나라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총면적 비교

산업단지 이름	총면적(천 m ²)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
아산국가산업단지	12,093
구미국가산업단지	22,283
온산국가산업단지	17,246
창원국가산업단지	25,302

(자료 : <http://www.kicox.or.kr/board/data/plan/list.php>)

비단 시민단체들만이 새만금 간척지의 산업용지 전환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일부 사업개발론자들이 갯벌보호에 집착하여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잘못된 발상도 대부분 새만금 간척지가 갖는 규모의 장대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새만금호는 제2의 시화호가 아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규모에 못지않게 새만금호의 규모도 우리나라 여타 간척지 호수들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굳이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새만금호의 규모는 팔당댐 하류에서 시작해서 행주대교에 이르기까지 한강 구간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겠다. 새만금 사업 반대론자들이 갯벌보전 주장 다음으로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새만금호에 대해서 그 수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수질개선 불가론인데,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먼저, 새만금호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청사진으로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호수로서 앞으로 그 완공까지는 적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더 세월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런 미래형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수질모델링이나 그 어떤 과학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정확한 수질을 예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 반대론자들은 성급히 제2의 시화호론을 유포하고 있는바, 이는 대단히 불성실한 자세라고 하겠다.

이런 비판론에 반해서 우리가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호수가 완공될 2010년대의 시점에서는 현재의 어떤 간척지 호수보다도 더 양호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기대와 희망의 근거는 과거 호수 수질오염 관리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에서는 호수의 수질 오염 문제가 이미 과거지사로 돌러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수많은 호수들에서 수질 오염과 부영양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호수 수질 문제는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바로 정부와 지역 주민, 연구자들이 일치단결해서 호수 수질 문제 해결에 발벗고나섰던 결과 얻어진 귀중한 소득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규모나 용도는 물론 제반 환경조건들을 고려할 때 많은 공통점을 가져서 새만금호의 모델 호수로 삼을 수 있는 일본 가즈미가우라호(霞ヶ浦)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극심한 수질오염에 시달렸지만 이후 중앙정부와 현정부, 지역주민들의 일치단결된 수질개선의 노력 결과 80년대부터 눈에 띄게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현재 수질이 안정 상태에 있다. 일본의 대부분 대형 호수들이 이처럼 80년대 이후 수질이 회복 단계에 있다는 것은 사회발전의 과정이 일본보다 약 20년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향후 수질 문제에 대해서 커다

란 시사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이런 선진국들에서의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속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과거 시화호 사태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그런 일이 재발할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호와 같은 대형 인공호수에 대해서 흔히 빠지게 되는 오류의 하나는 그 수질을 반드시 II급수 또는 III급수의 양호한 수질로 유지해야만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질 보전에 실패한 호수로 쉽게 간주해버리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이 활동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도 새만금호 수질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들과 정부 사이에서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데에는 이처럼 그 수질을 반드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만금호와 같은 거대 호수의 경우에 있어서 호수 전체를 한 수역으로 묶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질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호수 수질은 계절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호수 수질 변화의 특성을 무시하고 “연평균 BOD 몇 ppm”이라는 모델링 결과치에만 의존해서 새만금호의 수질이 바람직하느니 그렇지 못하느니 하는 논쟁을 벌이는 것도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비와호의 경우 연중을 통해 우리나라 호수수질 기준으로 I급수 또는 II급수의 수질을 유지하지만 수역에 따라서는 III, VI급수에도 못미치는 아주 심각한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새만금호와 같은 거대 호수의 경우에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수질예측치에만 의존해서 그 수질의 오염 정도를 쉽게 판정해서는 결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런 경도된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시민단체들이 가지는 새만금호 관련 다른 한 오류는 호수의 크기나 형태와 같은 물리적 인자들과 기온, 바람, 혼탁도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호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호는 그 표면적이 118Km²에 이르고 저수용량이 5억톤이 넘는 대형 호수인데 아직 그 세부적인 호수 형태나 깊이, 규모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 호수이다. 그런데 호수의 수질오염 현상은 상류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양뿐만 아니라 호수가 가지는 제반 물리적, 환경적 조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단적으로 말해서, 똑같은 용량을 갖는 두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똑같다고 해도 두 호수의 수질오염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는 바, 그것은 이런 물리적, 환경적 요소들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새만금호를 시화호에 비교하여 설명할 때에도 이런 점에 유념해야 하는데 시민단체들은 이런 점에서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호수 수질이 상류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량에 못지않게 호수 고유의 물리적, 환경적 특

설에 의해서 크게 결정된다는 사실은 호수수질관리 교과서 앞부분에 나오는 ABC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만금호의 경우는 아직 호수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규모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호수 재설계 연구를 통해서 새만금호 자체를 수질오염에 비교적 덜 취약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호수 설계에 있어서는 이처럼 수질오염에 덜 취약하도록 만드는 설계개념을 한번도 도입한 적이 없었으며 그 결과 시화호와 같은 졸작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호수 재설계를 통해서 물리적, 환경적 제반조건을 바꿀 수 있다면 수질오염도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만금호를 앞에 두고 그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 무우자르듯 그렇게 쉽게 단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수질관리의 기본 이론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하겠다.

새만금호에 대해서 심지어 일부 수질전문가들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환상의 하나는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는 주로 우리나라의 오염원과 하천오염도와와의 관련성(즉 오염원-오염부하량-하천수질-호수수질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대의 연장선상에서 새만금 상류 유역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신규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류 오염원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 그 규모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으며, 하수관망의 설비가 부실하거나 미비하고, 하폐수처리장의 가동효율이 크게 낮으며, 비점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기후 특성상 하절기 장마기에 전체 강수량의 50 %가 집중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설령 상류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다수 설치한다고 해도 하천에 유입되는 실질적인 오염부하량의 저감 효과는 크게 낮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상류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만금호 수질 개선 방안으로 환경부는 오직 상류의 오염원 저감 대책만을 내놓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이것에만 집착해서 새만금호 수질관리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호의 수질에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은 물론 일부 수질전문가들까지도 상당한 오류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결과 마구잡이로 새만금호 수질관리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되기까지 앞으로 10년 이상이 남은 거대 호수 새만금호의 수질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수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무지의 소치라고 하겠다. 앞으로 예상되는 제반 정황들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종합해서 극히 신중하게 수질 검토에 나서는 것이 보다 수질전문가적인 자세라고 하겠다.

IV.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의 비전

새만금 사업을 과연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2만8천 여 ha에 달하는 내부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농림부와 전북도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작년부터 다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주도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 토지이용 계획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발표자 개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명기해 둔다.)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 수립시에는 이 사업이 가지는 국토계획적 측면에서의 의의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심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지자원의 제공 효과로서 간척지 매립을 통해서 2만 여 ha의 농경지와 공업용지, 도시용지 등의 필요한 토지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국토 확장 효과).

둘째, 대규모 간척지에 기업농 체제와 새로운 과학적 영농체제를 도입하여 21세기형 선진 영농체제 도입의 모델이 될 수 있다(선진영농체제 확립).

셋째,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 부분에 새로운 담수호를 조성해서 새로 조성되는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만경평야에도 안정적인 배수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용수공급과 수해방지 효과).

넷째,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함으로써 호남지역의 열악한 교통체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교통수송의 획기적 개선).

다섯째, 관광농업, 산업관광, 담수호 관광, 서해 관광 등의 복합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전북권 일대의 변산반도, 내장산, 덕유산 등의 관광자원과 결부된 광역 관광공간 체계를 창출할 수 있다(지역관광의 활성화).

한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지역의 경제력을 증진하고 개발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여 국토의 균형적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다(지역 경제증진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 촉진).

둘째, 지역 주민소득의 증대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와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동시에 지역간의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지역개발과 지역간 격차 해소).

셋째,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대륙교역의 전진기지를 구축할 수 있다(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확보).

넷째, 한반도 내륙과 서해안과의 동서 연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이제까지 경부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경제개발 효과가 서해안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다(국토개발 중심축의 확장 이동).

이상의 의의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친환경적 새만금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표 1 : 21세기 농업·문화·관광·산업 통합형 지역개발계획의 성공적 실현

비전 :

- 바다와 육지·평야와 호수·인간과 자연·농업과 산업·관광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이상향
- 2만 헥타르 규모의 첨단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 국제 수준의 관광위락단지(Theme Park)와 휴양문화단지(Culture Resort) 유치
- 관광·문화·휴양 중심지로서의 물의 도시(水郷, Water City) 건설
- 5천 헥타르 규모의 수변(水邊) 자연보전지역 설정

목표 2 : 동북아 시대와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생동감 넘치는 국제경제 권역의 구현

비전 :

- 남북한·중국·일본을 잇는 관광·문화·물류 유통의 중심지 국제자유도시
- 새만금호·고군산군도·주변 백제문화제·변산국립공원·덕유산국립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 관광여객항으로서의 고군산항 조기 건설(Cruise Port)
- 국제 해상교통망과 육상의 철도·도로·호수수로 등의 원활한 연계네트워크 구축
- World Expo, 국제관광웨스티발, 연례 한민족박람회 등 국제적 행사의 연중 개최
- 환경농업, 생태관광, 휴식관광 등 특화된 관광문화 상품의 개발

V.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시민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관점의 다른 한 큰 요소는

이 사업의 경제성 문제이다. 특히 일단의 생태경제학자들은 새만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총공사비로 발표된 6조 원과 향후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1조 4천억 원)에 비교할 때 간척지를 농경지로 이용할 때 생산가능한 쌀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업의 경제성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설령 '안보미가'(남북대치 상황을 고려해 국제 미국가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 쌀값)를 고려한다고 해도 그렇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그렇지만 그런 판단은 현재의 조건에만 국한해서 그것에 경제학이라는 잣대를 대고 분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논농사가 주가 될 것이며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이런 비판론자들은 또 향후 논농사는 그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는 잃어버린 '잃어버린 10년' 효과 때문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가정과 상황 인식의 바탕에서 새만금 사업은 오직 중지만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시민단체와 생태경제학자들의 지적처럼 반드시 새만금 간척지 전체를 농경지로만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새만금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꼭 1조 수천억 원의 돈을 집어넣어야만 한다면 필경 새만금 간척 사업은 경제성을 상실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지를 농경지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함께 사용하며, 또 새만금호 수질관리가 과거에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사실상 불과 수천억 원의 투자만으로도 목표수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의 경제성 평가는 당장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요컨대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변화할 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법인데,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데에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혹시 상황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 간척 사업 불가의 논리가 타당성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논농사는 절대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WTO 체제하에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논농사를 다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그런 일은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논농사의 방식은 결국은 대농 중심으로의 개편뿐이고, 이럴 경우에 새만금 간척농지는 그런 대규모 영농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대농 중심의 개편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 여하에 따라서 새만금 간척지는 농경지의 규모를 얼마든지 재조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원래 계획대로 여의도 45개 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논으로 만들어질지, 그 면적이 조금 더 축소되거나 혹은 더 확대되거나 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달려있다. 또 우리가 새만금 간척지의 토지이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데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 자동차 산업 단지나 IT산업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구상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서 하나 없는 오직 담당자들의 머리 속에만 들어있는 초보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은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경제성 없음을 강조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새만금 간척지를 보다 유용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VI. 결론 : 친환경적 새만금 사업을 위한 제언

지난 수 년 동안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환경단체들과 정부측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지연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론의 분열도 심각한 양상에 이르렀다. 이제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낭비를 지양하고 정부의 각 부처들과 시민단체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국가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환경단체들의 경우 새만금 사업이 이미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하겠다. 새만금 방조제의 건설이 8, 90 퍼센트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까지 환경단체들에 동조해서 제안된 대부분의 대안들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갯벌 보전과 사업 중단만을 구두선(口頭禪)처럼 외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모름지기 현실을 과감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대안에 눈을 뜰 수 있는 법이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새만금 사업의 추진에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대안들에 대해서 -- 비록 그 상당 부분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 보다 열린 자세로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국민들이 새만금 사업의 추진에 대해 더욱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열린 자세를 지향한다는 마음에서 새만금 사업과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서 우리의 꿈을 실어보기로 하자.

갯벌 보존이나 간척지 개발이나 하는 논쟁을 제외한다면 -- 이 사업의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상 이런 논쟁 자체가 무력해 진다 --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가장 커다란 논점은

확보된 간척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 보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강남은 그야말로 과수원과 채소밭과 수박밭이 전부인 쓸모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강남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모든 사정이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는 강남의 경제력이 곧 서울의 경제력이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 지닌 이런 미래 잠재력을 예감이나 하였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볼 때, 설령 강남 개발의 구상이 1960년대에 탄생하지 않았더라도 필경 1970년대 혹은 1980년대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공론화되었을 것이다. 서울의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강남 너른 땅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랬더라도 필경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지연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1960년대나 70년대에 정부 당국자들이 강남 개발의 구상을 하기는 하였으되 그 때까지 서울 강북이 독점했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의 대부분을 강남으로 옮긴다는 대담한 계획이 아닌, 지금으로 치면 아늑한 전원 도시 또는 베드타운(Bed Town) 정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크게 축소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경우에도 필경 오늘날의 강남은 우리나라의 경제 중추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는 서울 강남의 경우와 닮은 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강남 개발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만금 간척지의 미래가 앞으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 되겠다. 만약 1960년대 당시에 강남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곳은 지금도 한가로운 과수원들과 논밭으로 그냥 남아있을지 모른다. 필경 온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강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 반대론자들의 견해 속에는 앞으로 10여 년 후에나 가시화될 새만금 간척지를 두고서 과연 이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송두리째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 전체를 농경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등, 그렇게 되었을 때 경제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등 전혀 가당치 않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누군가가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새만금 사업은 오늘

내일 완공되는 사업이 아니요 그 간척지가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10여 년이 더 걸려서 2010년대 중반 경에나 현실화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은 그 거대한 간척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어야지 그렇게 반대만을 일삼고 억지 주장만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순수하게 대평원과 호수로만 이루어진 전국토의 0.4 %에 해당하는 광대한 토지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 손에 쥐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땅이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 마땅히 눈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강남 개발의 사례로 되돌아가보자. 1960년대 경제개발의 의욕이 전국적으로 한창 고조되고 그동안 비대해진 수도 서울이 더 이상 강북에만 갇혀있지 못하고 어딘가에 새로운 등지 틀 곳을 찾고 있을 때, 바로 그 때에 다리 하나를 두고 한강을 넘어선 그 지역에 강남의 드넓은 땅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을까?

그렇다면 21세기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우리 후손들이 것처럼 드넓은 땅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되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국토의 가장 노른자위 부분에 새만금 대평원이라는 옥토를 미리부터 만들어두자고 하자면 그것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일까?

새만금 사업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비용경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 발표자는 2015년 새만금 간척지 초입에 서있는 본인의 미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 본다.

“사방으로 오직 지평선과 수평선만을 바라볼 수 있는 광활한 대지, 그 넓은 평야에 황금 물결이 넘실대고 상대적으로 잔잔한 호반 위에는 관광객을 가득 실은 유람선이 한가로이 일주한다. 새만금호 연변에 즐지어 서있는 각양각색의 리조트 호텔들과 그 옆 마리나에 계류하는 수많은 요트들도 한가롭다. 저 멀리 테마공원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아이들의 자지러진 함성이 바람에 실려온다.... 이제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2016 국제 원예전’ 전시장을 찾는다... 내일은 서해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오후에는 철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연보전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끝)